

여야, 특별법 제정 한뜻... 피해지원·재발방지 대책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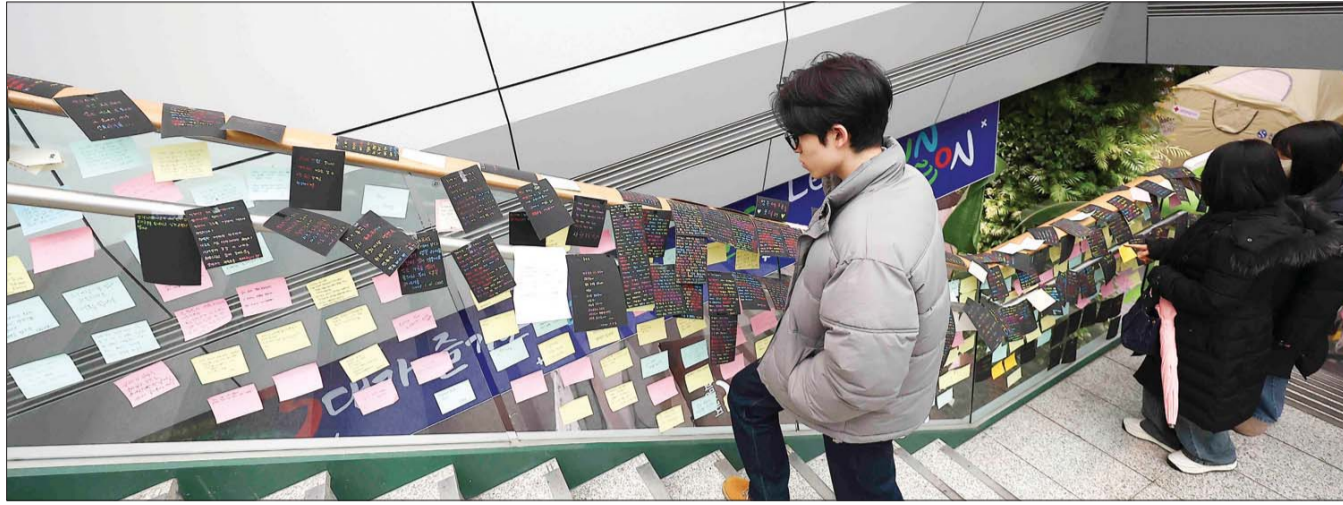
국민의힘 “정부와 협력해 조속 지원 필요시 국회차원 국정조사도 검토”

민주당 “특수성 고려해 법안 준비 생명보다 효율 중시하는 풍토 청산”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의 무안국제공항 참사 이후 국회에서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어 여야 합의로 진상규명과 희생자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가 발생했을 때 국회는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특별법을 발의하고 처리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2015년에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를 규정하고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 청문회 실시의 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8일째인 5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계단에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추모 메시지가 놓여 있다. /뉴스사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구체적으로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심리상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 추모사업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최근에는 여야 합의로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 및 시행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역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조위를 설치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만약 이번 제주항공 참사에도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앞선 특별법과 같이 특조위를 통한 진상규명, 피해자 구제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먼저 특별법 제정 가능성을 띄운 정당은 국민의힘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비상대책위원회 의에서 “국민의힘은 생활·의료·심리상담 치료 지원, 근로자 치유 휴직을 포함한 유가족 지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며 “정부와 협력해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과 국정조사

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에도 무안국제공항을 찾은 유가족들에게 “국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적절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을 예고하면서 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에서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이런 후진적인 풍토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면서 “돈보다 생명이 다. 민주당은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 그리고 확실한 피해자 권리 보장,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12·29 항공참사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참사와 대형 재난에 관한 특별법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참고하고 이번 참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국토부, FDR 美 이송... 원인규명 박차

(비행기록장치)

조종실음성기록장치 녹취록 작성 동일기종 운영 항공사 특별점검 실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의 참사 원인을 규명할 비행기록장치(FDR)가 오는 6일 미국으로 이송된다.

5일 국토교통부 중앙사고대청본부에 따르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손상으로 국내에서 자료를 추출하기 힘든 FDR을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로 보내기 위해 준비 중이다. 사조위 조사관 2명은 오는 6일 출국 예정이다.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녹취록은 국내에서 작성했다.

사고기는 항공기 엔진 1기를 인양했으며, 나머지 엔진 인양과 꼬리날개·랜딩기어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사망자는 179명 전원 신원확인을 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의 유가족 대상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친 가운데 전일 오전 7시 기준 장례식장으로 총 70명을 이송하고, 임시안치소에 109명을 안치 중이다.

국토부는 현재 사고 동일기종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이

스타·에어인천·대한항공 등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국토부는 “발견된 문제점은 즉시 시정하고 정비인력 확충 등 개선책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전국 공항의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과 항공사별 자체 안전강화대책 이행에 대한 수시점검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상황지원센터는 합동분항소 운영을 연장하고, 유가족 긴급 생계비 지원과 유가족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등 유가족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주말 강설을 대비해 무안공항과 분항소 인근 도로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정부 지원이나 보상 전 법률상의 상속권자·보상권자 검토, 상속·보상금 우선순위 등에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유가족 법률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제주항공, 대규모 감편... “안정성 강화”

동계기간 1900편 감축 계획

제주항공이 안전운항을 위해 감편에 돌입하는 등 항공기 운항 안정성 강화에 집중한다.

5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운항 안정성과 정시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선 및 무안발(發) 국제선 총 1116편을 감편한다.

감편 기간은 1월 6일부터 동계스케줄 종료 시점인 3월 29일까지다. 국내선 및 무안발 국제선에 한해 감편이 우선 진행되며 추가 비운항 노선은 확정되는 대로 재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감편 대상은 구체적으로 국내선 ▲김포~제주 ▲부산~제주 ▲청주~제주 ▲무안~제주 등 4개 노선과 국제선 ▲무안~나가사키 ▲무안~방콕 ▲무안~코타키나발루 ▲무안~타이베이 ▲무안~장자제 등 5개 노선이다.

제주항공 측은 “비운항이 결정된 항공편은 당사 인접편으로 스케줄 변경도

는 환불 조치를 통해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항공은 동계 기간 총 1900편의 운항량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운항이 잦은 국내선과 일본·동남아시아 등이 감편 대상이다.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운항 횟수가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감편을 진행할 것”이라며 “국내선을 포함해 일본과 동남아 등 운항 빈도가 높은 국제선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홈페이지나 개별 공지를 통해 대체편 제공과 예약 변경 지원을 통해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편 운항에 따른 실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송 본부장은 “운항안정성을 확보하는게 최우선이다”며 “현재는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보다 안전 확보와 고객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희생자 수색 마무리... 악성 게시물 본격 수사

행안부 “장례 후에도 유가족 지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179명 전원의 시신 인도 절차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장례 후에도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게시물 총 99건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시신과 유류품을 수습하기 위한 대규모 수색 작업이 이날 마무리됐다. 수사 당국은 의미 있는 유류품이나 시신 일부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추가 발견 가능성도 크지 않아 대대적 인력을 투입한 수색 작업을 종료하

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사고 발생 이후 7일간 동체와 활주로, 갈대밭 등 사고 현장과 주변에서 시신과 유류품 등 수습 작업을 진행했다. 사망한 179명의 희생자를 모두 수습했고, 소유주가 명확한 유류품은 유족들에게 전달했다.

179명 희생자 전원의 시신은 절차를 거쳐 이날 유가족들에게 모두 인도됐다. 희생자들의 유류품도 인도됐는데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유류품은 유가족이 확인해 찾아가 수 있도록 안내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장례 후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

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장례 후에도 유가족을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애도와 추모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광주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분항소를 연장 운영하고, 2차 합동 위령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또 “유가족의 서류 제출 편의를 위해 각종 증명서류를 간소화했고, 장례부터는 전담 공무원이 증명 서류 발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게시물 총 99건과 관련 조사 중이다. 전남 유가족을 모욕하는 내용의 악성 게시물을 올린 피의자 1명이 검거됐다. 악성 게시물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고소·고발도 순차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원승일 기자 won@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보험금 신속 지원

김기문 회장 “사회안전망 역할 충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신속 지원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소기업 공제 상품인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상공인 희생자들에게 공제금과 단체보험금 등을 신속하게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참사 희생자중 노란우산 가입자는 2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희생자 유가족에게는 ‘노란우산 공제금’을 지급하고 최근 2년 이내에 가입한 경우에는 복지서비스로 지원하는 단체보험을 통해 최대 1억

5000만원(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을 더 지급한다.

노란우산은 최대한 빨리 희생자들의 가입 여부를 확인해 신속하게 공제금이 나 단체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직접 방문, 상담과 지원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김기문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 묵묵히 생업을 이어 온 소상공인들이 이번 참사에 포함돼 더욱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노란우산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여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훈 기자 bada@